

2020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0.11.2.부터 11.30.까지 21일간(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개 감사반 각 7일간 교차 진행)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2016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69건(본처분 47건, 현지처분 2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발췌한 수범사례 11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구 분	처분현황(건)			처 분 요 구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계	추징 환수	환급 감액
계	69	47	22	69	38	21	10	14/ 527,402	13/ 526,130	1/ 1,272

2020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지 적 사 항]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징계자 표창 추천 및 수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에 따르면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하고, 제4조(포상의 종류)에서 포상은 구민상,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한 “201*년도 하반기 퇴직자 포상 계획[○○과-**(201*. **.*.)호]”을 보면 포상대상은 퇴직예정자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재직기간 10년 이상)로 하고, 선정은 미추홀구(당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공직자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대민 봉사행정에 솔선 수범하는 등 장기간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공적사항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고, 징계 등 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한 대상자인 “B”를 표창대상자에 포함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면평가 시행에 따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결과의 반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서는 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고,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특별승급, 개방형직위 충원, 보직관리 등에 참고할 수 있으며, 역량개발·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8건¹⁾의 “다면평가(입체형 역량평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확인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및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을 추진근거로 하고 있다.

1) 매년 2회(상·하반기) 추진

각 시기별 “시행계획” 및 같은 기간 “다면평가(입체형 역량평가) 실시결과 보고 (이하 “실시결과”라 한다)”를 보면 평가결과는 6급 이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시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전보 인사 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 시 반영하며,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개인 역량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과 맞지 않게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계획”과 “실시결과”에서 정한 활용방안을 따르지 않는 등 다면평가 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개선]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면평가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결과의 반영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미추홀구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의 대상사무 기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의거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미추홀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미추홀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시에는 제10조(협약체결 등)에 따라 공증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제12조(사무편람)에 의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편람을 비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부터 제10조(지도·감독)까지에는 미추홀구 문화시설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등 미추홀구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는 2개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따라 “ㄱ”은 미추홀구 공공단과 “ㄴ”은 □과 200*년부터 위·수탁협약 및 재위탁협약을 체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현재까지 □□과에서 이행한 문화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처리 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할 협약사항 구보게재, 사무편람 작성과 구청장 승인,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감사 등 주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주의] ① 문화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직원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문화시설 ‘ㄷ’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수탁기관의 시설 사용료 기준 적용 부적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 제1항에 따르면 미추홀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12조(사용료 등)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 ‘ㄷ’의 수탁기관인 ㄱ은 별도의 사용료 기준을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2. 위탁시설 사용료 징수 부적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ㄷ 위·수탁 협약서(20**.**.**)」 제7조(사업의 수행)제2항에 의거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 및 관람객 등에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8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제1항에 의거 관계 법령과 위탁자의 관련 조례, 지침, 협약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10조(수입금의 징수·처리) 제2항에 따라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분기별로 위탁자에게 내역을 보고한 후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라 위탁자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탁자 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ㄴ 대관업무 00건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료 총 000천원을 징수하였는 바, 해당 징수액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경우 행사 용도 시설 사용료 0건 000천원, 공연 용도 시설 사용료 0건 000천원과 주말 행사 할증료 0건 00천원 등 000천원을 부당하게 초과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대관(3일 대관) 할인대상자에게 할인금액을 미적용 하거나 장기대관 할인 미대상자(2일 대관)에게는 할인하는 등 수탁자 임의로 시설사용료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수탁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설 사용료 기준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맞춰 정정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ㄴ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등 민간위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미추홀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구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적용시설의 범위)에 의한 미추홀구의 체육시설은 2곳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조례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제1항에 의거 사용 개시일 1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청장은 조례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제3항의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각 호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 *. ☆과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체육 시설을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재위탁 : 20**.*.~ 20**.**.**)을 체결하였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수탁자인 ☆은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2항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물 위·수탁협약서」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1항에 따라 유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협약서 제11조(사용료 수입금 조치)에 따라 매월 징수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전액을 익월 3일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외수입 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 사용료 외의 위·수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례, 시행규칙,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개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물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체육시설 사용료 외의 수익금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기록갱신보상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Θ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의 [별표4]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선수단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추홀구청 Θ선수단의 입상보상금 지급기준은 입상과 기록갱신 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고)의 2)에서는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되,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급기준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에 대한 추가 보상금은 입상(순위)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기록갱신 보상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항목이 아님에도 미추홀구 △△과는 @@대회 시 수립한 **신기록(0건, 각 0명) 및 ##대회에서 수립한 ##신기록(0건, 0명)에 대한 기록갱신보상금 지급 시에도 각각 100%, 200% 금액을 추가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Θ선수단에게 착오지급한 기록갱신 보상금 000천원을 환수처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생활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미추홀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하여 미추홀구체육회에 매년 민간경상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5조(실적보고)제1항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정산검사)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청장은 정산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조례 제26조(정산검사)제3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 지원한 생활체육대회 보조사업 정산서의 증빙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에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무통장 계좌이체를 하거나 영수증을 미첨부 하는 등 보조금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음에도 미추홀구에서는 보조금 사용 적정으로 처리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검사와 보조금 지원단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실, □□과

내 용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13호)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통합사례관리, 주민 참여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인력을 2018~2022년까지 확충하여 읍·면·동에 배치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착한 읍·면·동의 서비스 대상을 공적급여 대상자에서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 대상 등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시군구 복지정책 총괄부서는 지역 내 서비스·자원의 연계성을 포함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실행·모니터링 등 사업의 기획·총괄관리 하고 읍면동장 리더십 강화, 보건복지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민관협력 워크숍, 사례관리 기법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며, 위기가구 발굴, 자원연계 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연계 협력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에 따르면 희망복지지원단²⁾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따른 보건복지전담팀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관리를 통해 읍·면·동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복지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정착·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이 목적에 일치되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확인·관리·감독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최소 연 2회 실시하고 지표에 따라 읍·면·동의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읍·면·동에 결과를 통보, 개선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읍·면·동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하여 통합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과 읍면동 간 역량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인력배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인력충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 까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이 동에 1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2021.3월부터 2022년까지 10개동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 미추홀구 본청 내 관련부서, 동, 민간기관 등의 참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 및 인력확충, 주요사업 추진, 지원체계 구축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실행방안의 내용이 미비하여 이에 따른 총괄·관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 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 목표³⁾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9년⁴⁾ 일부 동에서 방문상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점검, 개선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추홀구 ◇◇과(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 지원·관리를 위해 업무 모니터링을 최소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하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동 컨설팅을 실시하여

2) 미추홀구 희망복지지원단 : ○○과의 2개팀으로 구성·운영

- 사례관리팀(통합사례관리 사업 중심의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의 업무), 서비스연계팀(자원 총괄관리 업무)

3) 동장 월 5가구 이상 동행 방문(연 60가구 이상), 보건복지팀장 월 10가구 이상 방문(연 120가구 이상), 담당공무원 월 15가구 이상 방문(연 180가구 이상)

4)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임.

동 간 업무역량 및 성과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고 격차를 완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나 추진된 사항이 없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문제로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⁵⁾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용현동 형제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통합·연계 제공과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추홀구는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등을 찾아내어 이들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권고] 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을 동에 조속히 설치하시고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시기 바라며,
- ②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시고, 동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미추홀구 사회복지예산(일반회계) 연도별 현황 : 2016년 274,003백만 원(59.05%), 2017년 294,949(60.97%), 2018년 357,840 백만 원(62.95%), 2019년 416,651백만 원(65.65%), 2020년 476,890백만 원(65.8%)

※ 2020년 미추홀구 지방재정공시 참조

인천광역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제1항에 따라 군·구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정기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운동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법규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구성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같은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제1호~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규정에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 관계가 명확한 자(시설장 제외)는 운영위원으로 임명·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을 규정에 맞지 않게 위촉하였으며, 시설 지도·점검 시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했으나 감사일 현재(2020.11.)까지 조치한 사항이 없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급여 관리 소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사회복지시설 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는 퇴직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고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종사자도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미추홀구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퇴직급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0개소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퇴사자 0명에 대한 퇴직적립금 0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수익금 사용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생산품의 경우 판매수익금 포함)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익금의 일부를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기능보장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복리후생비 지급 시에는 시설 소속 모든 근로자(종사자, 근로장애인)에게 공히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 소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수익금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시설 ○”이 운영수익금 승인 요청한 내역 중 일부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대해서 미추홀구가 승인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관련 규정 등에 준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을 임명·위촉하시기 바라며,

② 사회복지시설의 퇴직자 중 1년 미만 근무한 종사자 퇴직적립금(보조금) 000천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수익금은 근로장애인 및 이용장애인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시설운영을 위해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면밀히 확인하여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회복지시설에서 예산 편성·집행은 물론 종사자 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제2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징수 결정 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청문 시작 10일전까지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할 수 있으며 징수가 결정 되면 징수결의(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용)하여 고지서를 발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고지서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미추홀구의 기초생활 보장비용(생계급여, 주거급여) 징수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율은 30.6%이며,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율은 75.6%이다.

미추홀구(○○과, ●●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비용(생계급여, 주거급여)을 세외 수입정보시스템에서 징수결의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수기대장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납자에게 공문으로 납부안내문만 발송하는 등 독촉 및 체납 관리가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기초생활 보장비용(생계급여, 주거급여)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징수
결의 및 관리하고, 보장비용의 조속한 환수를 위하여 독촉 고지, 상계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확인조사) 및 제37조(신고의 의무)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8조(조건부수급자)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근로능력판정 유예기간 만료일 70일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안내대상자를 확인하여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만료예정일임을 통보하고 대상자는 30일 전 까지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근로능력평가의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예정자가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고, 근로능력평가 자료를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 ~ 만료일 이전 제출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판정 완료일까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서 유효기간 연장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효기간 초과’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로 관리하여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0명에게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연 또는 미통보하여 대상자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아 근로능력 판정이 유효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감사일 현재(2020.11.27.)까지 진단서 미제출로 유효기간이 초과된 자에 대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변동처리 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아야 하며,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영유아 0명에게 과오 지급한 000천원과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중복지원 받은 영유아 0명에 대한 000천원을 회수 조치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과오지급 된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된 양육수당과 보육료 000천원에 대하여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주민세(균등분, 재산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주민세(균등분) 부과에 관한 사항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세법」 제75조,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매년 7.1.[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에서 과세 기준일은 매년 8.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납기를 매년 8.16.부터 8.31.까지로 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와 법인에 대하여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여야 하나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연도별 주민세 균등분 과세내역을 검토한 결과 A 등 32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등 34건 3,207,500원과 B은행 C지점 등 8개 법인에 대한 법인 균등분 주민세 등 24건 3,093,750원이 과세 누락된 사실을 지적 받아 2020.5~6월 중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주민세(재산분) 부과에 관한 사항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세법」 제80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1.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 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7.31.까지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인·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 균등분 과세내역과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내역 등을 상호 비교하여 매년 7.1.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두고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주민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나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주) 등 107개 사업소에 대한 2016~2019년 주민세 재산분 172건 36,522,870원을 과세누락 한 사실을 지적받고 2020.5~10월 중에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연도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현황 점검 결과 B 등 7인의 2017~2019년 주민세 재산분 7건 1,272,210원이 이중으로 신고납부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전조사기간에 이중납부 사실을 지적받고 2020.4.29.에 감액·환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통보] 감사결과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5~10월까지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하니 업무 연찬으로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건축물(위법·사전입주·가설·중축·대수선) 취득세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건축물(위법건축물, 사전입주)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건축부서의 위법건축물 적발에 따라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 사전 입주로 고발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건축과에서 감사자료로 제출한 위법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현황을 취득세 과세내역과 점검한 결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ㄴ동 ***-1 A 등 7인에 대한 취득세 등 2,577,430원, 사전입주한 ㄴ동 ***-8번지 B 등 4인에 대한 취득세 등 8,596,7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고 2020.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하였거나 과세 예고 중에 있다.

2. 건축물(가설·증축·대수선) 취득세 부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 “개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건축물 중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의 수선 또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9조제5항 따르면 임시홍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후단 단서에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임시건축물의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존치기간 연장 신고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에도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 면적을 과소 신고한 ㄷ동 ***번지 ◆◆(주) 등 8개소의 취득세 등 32,348,660원과 증축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ㄱ동 ***-6번지 □□ 등 7개소에 대한 취득세 등 27,126,300원이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 당시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아 2020.4~8월 중에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한 취득세는 조속히 수시 부과하시고 지방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건축부서의 과세자료를 확인하여 취득세 과세내역을 점검 후 누락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취득세(중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대도시 내 법인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도시에서 설립한 지 5년 이내의 법인과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중과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과세 관청에서는 대도시 내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추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서는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과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지적받고 2020.5~7월 중 취득세 등 41,429,710원을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내 매각에 관한 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구 지방세법(2018. 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는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미추홀구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A)가 ○동 **1 000호 외 0개 호수를 201*.*.*에 취득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201*.*.*.자에 매각하였음에도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까지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 받고 취득세 등 3,574,050원을 2020.6월 중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통보] ① 감사결과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5~7월 까지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② 취득세 중과세 및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소유권 이전 여부 검토 및 출장하여 감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지 확인하고 출장복명을 실시하여 향후 추정사유 발생 시 과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면자료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통보(시정완료)

제 목 재산세(증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상업지역 내 공장 재산세 증과에 관한 사항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세조례」 제10조에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증과세대상지역으로 규정)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인 ㄱ동 ***-*번지에 (주)◆◆이 공장등록을 하고 ‘전기 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부품 등’을 생산 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건축물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5~2019년도 건축물 재산세 등 23,405,830원을 누락한 사실이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지적되어 2020.5~6월에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2. 사회복지법인 의료업 재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6항에서 감면율을 연도별로 축소·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감면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등 감면율

세 목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 산 세	면제	75%	75%	50%	50%	50%
도시지역분	면제	75%	75%	50%	50%	5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일반과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6항 연도별로 발췌 정리하였음.

한편, 미추홀구에서는 □□협회가 ㄱ동 ***-14번지에 □병원을 운영 중에 있는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감면율(2015 ~ 2016년 : 75%, 2017 ~ 2019년 : 50%)을 연도별 차등 적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2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재산세(건축물, 토지) 등 20,501,820원을 과다 감면한 사실이 2020.2. 시 종합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지적되어 2020.5~6월에 수시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통보] ① 감사결과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5~6월까지 누락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② 재산세 관련 지방세 법령을 숙지를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현장 출장하여 해당 부동산이 감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지 출장복명을 실시하는 등 감면부동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유재산 취득 후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신축 건물 미등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취득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에 밟아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는 ㄷ센터(2019.2.1. / 1,002백만 원)를 신축 후, 약 2년 경과한 2020.11. 감사일 현재까지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두어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2. 신축·매입한 건물의 손해보험·공제 가입 누락 또는 지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0.11. 감사일 현재 미추홀구 ♦♦과에서는 ㄷ센터를 2017.5. 신축 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약 10개월 간 지연가입하고, 미추홀구 △△과에서는 ㄱ선수단 숙소를 2019.9. 매입하였으나 2020.11. 감사일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을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였다.

또한 미추홀구 ◇◇과에서는 매입한 ‘ㄴ경로당’ 등 6건은 약 2개월에서 7개월씩 공제에 지연가입하여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초래될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지 못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과의 취득 후 건물 미등기 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조치하시고,
② ♦♦과의 공제보험 미가입 건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개선요구

제 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공제금 부과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8호 서식] 허가 조건 제6조 및 제29조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르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00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표 1]과 같이 공유재산(건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하고 있다.

【표 1】 공유재산(건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현황

(단위 : 개소 / 2020.10.31. 기준)

재산종류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대부)			비고
	합계	유상	무상	합계	유상	무상	
총 112개소	34	14	20	78	76	2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또는 공제금 부과 규정 부적정

[표 2]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등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별지 제8호 서식] 제6조 및 대부 시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가 미리 보험료 및 공제금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표 2】 공유재산법과 「인천 미추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비교

구 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2항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	사용자가 손해보험 개별가입 단, 구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채구성

특히 미추홀구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사용·수익허가조건에 따라 8공원 매점 0개소에 대해 미추홀구 ■■과를 통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갱신 또는 지연가입시 공유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자에게 공제금 미부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유상·무상) 건에 대한 공제 보험료 부과확인 결과 [표 3]과 같이 미추홀구 ■■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고, 미추홀구 △△과의 “□봉사단” 등 13개소는 사용자가 개별보험에 미가입하였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 등의 재산관리관이 공제금 총 13건 1,442,420원(추정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 하지 않는 등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특히 미추홀구 ○○과에서는 □□ 외 11개사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계약서 상에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허가조건 제6조의 공제금 부과조항을 누락시켜 보험료 352,540원(추정금액)의 부과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차기 도래하는 신규 또는 연장 계약일에 공제금 부과가 가능한 상태로 재산관리에 소홀하였다.

3. 공유재산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중복

미추홀구 ○○과에서는 [표 3]의 공유재산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였으나, 미추홀구 △△과의 □복지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따라 별도의 보험을 중복가입하였다.

【표 3】공유재산 손해보험 및 공제 중복가입내역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허가 면적(m ²)	사용자	보험개별 가입여부	공제가입금액 (추정)	담당부서
1	무상	궤동	***-**	****.3	□복지관	2020.06.25. ~2021.06.25.	472,260원	△ △과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법」 제672조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 중복가입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액의 총액은 동일하여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현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중인 건에 대하여 미부과 공제금을 부과하고,

②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사용자가 납부할 공제금을 미추홀구가 부담 또는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취지에 맞게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제6조를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주의요구

제 목 대행사업 물품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실

내 용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수탁자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공사·공단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라도 수탁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로 구매한 물품⁶⁾ 및 위탁자가 직접 구매 후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처분의 사유 발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위탁자의 불용결정 후 처분하도록 하고, 위탁해지 후 업무인수 시에는 반납,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6) 자산취득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경비 등으로 구입한 물품. 단, 소모품 제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018. 7월 행정안전부)

한편 미추홀구 ◇◇실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ㄱ공단과 위수탁계약서(2000.12.)를 총괄 작성·계약하였고, 2003.3.15.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등의 대행사업을 추가⁷⁾하였다. 그리고 2018년까지 해당부서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을 제출받지 않고 공단과 직접 협의하여 총괄 작성 후 공단에 일괄 지급함으로써 대행사업비로 구입한 물품관리 주체가 기획예산실인지 해당 위탁부서인지 불분명하게 되었다.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여 지급한 미추홀구 ◇◇실은 공단에서 최근 3년 간 총 39개 43,154천 원 상당액의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없이 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불용처분(매각·폐기)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소홀하였다.

특히 미추홀구 ◇◇실에서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위탁업무의 구청 및 공단의 이중관리로 민원처리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및 예산낭비의 소지로 ❀❀과와 위탁해지(2018.5.25.) 및 인수 협의한 “ㄱ공단 위탁 대행사업 업무조정 결과보고”[◇◇실-*****호(20**.*.*)]에는 공단이 해당업무에 사용하던 장비 2개(진동로리 1, 콤팩트 1)는 ◆◆과가 사용해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단은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위탁업무의 해지 관련하여 “위탁대행사업 업무 조정 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및 향후추진계획”[공단-*****호(20**.*.*)]에서 “미추홀구 ◆◆과의 장비 2개 미사용 의견”을 포함하여 ◇◇실에 보고하였음에도 ◇◇실은 해당 장비를 불용처분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관련 공단에 무상대부 중인 장비는 2개(총 4,785천 원)가 아닌 실제 6개(총 23,475천 원)였으며, 그 중 4건 18,690천 원 상당은 2019년 매각 처분(총 3,925천 원)되었고 나머지 2개는 2020. 11. 감사일 현재 공단에서 보유 중이다.

◇◇실은 위탁업무 종료 시 무상대부중인 해당 장비를 반납 또는 재활용 가능한 경우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을 했어야 함에도 물품관리에 소홀하였다.

7)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관리지침 통보”(남구 건설과-243 : 2003.12.12.)의 추진현황에는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사업” 조례개정으로 기재.「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소규모 주민민원 불편사항중 구가 위탁하는 사업 추가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보유 중인 장비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하고,
- ② ◇◇실에서 총괄 편성하여 대행사업비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물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대행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 등으로 무상 대부된 물품(자동차 포함)이 위탁자의 불용결정 없이 불용처분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와 제8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기금운용성과 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지만 출납폐쇄 기한을 초과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받거나 의결 없이 자체 작성하였다. 또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서에 각각 성인지기금 운용계획 및 성인지기금결산서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2016~2017년도에는 옥외 광고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다.

미추홀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성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금운영 성과분석의 지표별 세부기준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부분⁸⁾과 관련하여 특히, 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17회계연도에서 25%, 2019회계연도에서 위원 7명 중 1명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위원 비율이 1/3미만이 되어 0점을 기록하는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적정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 사항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한 준수, 성인지보고서의 포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비율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 2017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단위 : %) : 지표 당 25% 【4개 지표 - ①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③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④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70% 이상】

나) 2019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단위 : 점) : 기본점수(60점) + 지표 당 10점 【4개 지표 - ①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소집회의 시 위원평균 참석율 1/2이상 ④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이며, 구의원은 민간위원으로 보지 않음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1. 수의계약 내역 비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는 흥특별회계 수의계약 공사 중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2. 대가지급 기한 미 준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는 같이 「○○로 ***번길 하수암거 정비공사」 등 2건은 대가 청구에 따른 대금 지급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3.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고, 이 때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 ▽▽과는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보증서의 보증 개시일이 선금지급일과 같거나 보증 종료일이 사업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미만인 경우 등 규정과 달리 책정되었음에도 확인 및 보완요구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고 채권확보도 소홀히 하였다.

4. 조축제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3. 행사운영비(201-03)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는 행사운영비로 건축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행사대행, 무대설치, 개·폐막 공연, 영상제작, 홍보물 제작 등 동일 행사를 2017년 0건, 2018년 0건, 2019년 0건, 2020년 0건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시어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시고, 대금 지급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선금지급 시 채권을 확보하시고, 동일한 사업을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시정·주의요구

제 목 맞춤형입찰정보 제공사업 계약 관련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당사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 5일 안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별표 1]에 따르면 용역 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100의 금액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전국 입찰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여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제공사업」을 위탁용역을 통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는 2013년 사업 시작 이래 ☆☆(주) 1개 업체와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미추홀구 ○○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2016.8. 이후~감사일 현재) 중 해당

업체와 4회 계약 체결 시 모두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따라 대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8년과 2019년도에 계약금 전액을 일시로 지급하였다. 또한 계약업체의 월별 실적보고서를 접수 받은 후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2019.12. 이후부터 등록하였음)

해당사업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회원기업 1개소가 평균 1년 동안 입찰정보 제공사업을 통해 낙찰된 건수는 1.6건이며, 2013년 이후 사업 예산액(2,100만원)과 계약당사자는 변동이 없었다. 또한, 미추홀구는 해당 사업의 운영의 적정성 및 효용성 등에 재검토 없이 8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기업의 만족도 조사 등의 피드백 절차도 시행한 적이 없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개선] 맞춤형입찰정보 제공사업의 운영 적정성 및 효용성에 대한 분석과 회원기업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미 징구된 지역개발채권에 대하여 추가 매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업계약에 따른 대가지급과 지역개발채권 매입 및 전자기록물 접수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미술품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V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한 보관·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매년 12.31.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해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 가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품은 예술적,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A~D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등급과 무관하게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은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 작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A, B등급 미술품은 각 분야별 감정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실물감정을 의뢰하고, C, D 등급 미술품은 자치단체 미술품관리 자문 위원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술품 관리대장에 등록 시 작가명, 작품명, 크기, 취득일시, 취득가격, 사진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술품 사진 촬영 시 작품과 촬영자의 눈높이가 맞도록 정면에서 촬영하고 창문이나 커튼불빛이 사진에 나타나지 않게 촬영하여야 하며, 작품을 전시할 때는 명제표가 작품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품 관리를 위한 일반수칙에서 작품 가까이에 하론소화기 비치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감사일 현재 미술품(272개) 관리와 관련하여 매년 시행해야 하는 미술품 수요 조사 및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5년 주기의 미술품 가격 재평가도 실시하지 않아 소장 미술품에 대한 가격평가가 한 번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또한, 서울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품목록대장에 상당수의 미술품이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부 미술품은 역광, 정면에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 등록되어 있고, 미술품관리대장 상의 관리번호와 명제표상의 관리번호가 다르게 기입되어 있고 일부 미술품은 명제표에 다른 미술품명이 기입되어 있으며, 미술품 보관 장소에 하론 소화기가 아닌 일반소화기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IV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소장 미술품에 대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서울행정시스템 등록 자료 현행화, 명제표 정비, 미술품 보관장소에 하론소화기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보관·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미술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 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및 3. 하자검사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이하 “정기하자검사”라 한다)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이하 “하자만료검사”라 한다)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하자검사와 관련하여 2016.8.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00건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000건에 대해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00건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만료검사 기간(하자만료일 이전 14일~하자만료일)을 준수하지 않고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하자만료검사 후 000건에 대해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부서는 사업부서에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통보 이후 사업부서의 하자검사 미 실시에 따른 독촉 등 하자검사 이행완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하자검사와 만료검사 이행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실, ■■과, ◇◇과

내 용

「미추홀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제11조(용역실명제)에 따르면 용역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은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계약체결 현황 통보, 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 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을 맡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제13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용역과제 담당자 등을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하게 한 후 용역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성과품 2부와 원문수록 저장 매체 2식 및 용역결과 활용계획서를 행정자료실에 제출하며, 예산담당 부서에 용역평가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과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3건의 용역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용역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보고하지 않았고, 1건은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용역 업무 추진 시 「미추홀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에 따라 용역평가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용역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실, ΘΘ과, ☆☆과

내 용

1. 제안서 위원 선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조형물 제작 설치」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면서 관련규정⁹⁾을 준수하지 않고 의회¹⁰⁾ 의원(2명), 축제추진위원장(1명) 등 3명을 제안서 평가 위원회 위원에 포함하였으며 「ㄱ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나 예비명부 21명 중 다른 시·도 위원은 2명(10%)만 포함하였다.

9) 제안서평가 예비명부 :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10)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2.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및 배점한도 조정사유 미명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입찰가격평가(20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조정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스 사업, ㅇ 활용사업, 흥 용역’ 3건은 제안서평가 시 정량적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30%를 초과하였고 ‘츠 조성사업, 트 제작 설치’ 2건은 정성적평가(60점→7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10점)의 배점한도를 조정하여 입찰 공고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어야 하나 명시하지 않았다.

3. 제안서 평가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라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추홀구에서는 ‘ㄱ 제작’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개 선 요 구

제 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 15.>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미추홀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2017.03.06.과 2018.05.21. 두 번 개정하였으나 제2조(위원회 구성)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일 현재까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시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5호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자격이 삭제(2016.1.15)된 이후에도 자격에 맞지 않는 회계 관련 협회 3명을 계속 연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개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고 되어 있고 이때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심사방법·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설계공모 운영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¹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고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심사위원 자격은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1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용역2.1억원) 이상인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제11조에 따르면 발주기관 등은 공모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되나 단,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소속 임·직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따르면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에서는 3건을 건축설계 공모하면서 ‘ㄷ 신축’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교수 4명, 건축사 2명, 공무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고 ‘ㅇ 신축’의 심사위원은 교수 5명, 건축사 2명, 공무원 2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공무원 3명은 관련 지침에서 정한 위원 자격에 맞지 않는다.

또한 ‘ㄷ 신축’의 설계공모 시행 공고(2016.6.29.) 이후에 심사위원을 구성(2016.10.11.)하였고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ㅇ 신축’의 설계공모 시행 공고(2017.10.23, 변경공고 2017.11.7.) 이후 심사위원을 구성(2018. 3. 28.)하여 그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ㅅ 신축’ 설계공모 시행 공고(2019.1.29.)이후 심사위원 구성(2019.5.1.)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시고 업무 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개발사업 구역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련

기 관 명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도로의 구역 내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리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한다.

【표】 도로점용(굴착) 허가 현황

(단위: 건)

연 도	신 청	허 가	취 소	비 고
합 계	3,032	2,854	178	
2017	1,083	1,019	64	
2018	963	897	66	
2019	986	938	4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도로법시행령」 제7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점용료 징수는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적사항

미추홀구 ☆☆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위임 받아 도로 점용료를 부과·징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호 *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서 도로 점용료 누락

호 *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설치한 도로 지하매설물(궤공사 전력관로)에 대하여 2018년 허가에 따라 2018년 점용료는 부과·징수 하였으나,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하여야 하는 2019년도 정기분 도로 지하매설물(관로 5,101m) 점용료(개략 32,000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부과·징수에서 누락하였다.

또한 2018년 호 * -1블록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입력 없이 인수함으로써 감사일 현재까지 미추홀구 도로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 -1블록 지하매설물(궤공사 전력관로) 설치 현황이 누락되었다.



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미추홀구 ☆☆☆과(△△과)에서는 ㄷ동 ****번지 일원 「ㄷ 도시개발사업」(이하 “ㄷ구역”)에 대하여 2019.3.29.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도로 노선 30개(연장 7.833km, 면적 132,569㎡)에 대하여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인수 받으면서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기관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인수(협의) 소홀¹²⁾로 인하여

미추홀구 ☆☆☆과에서는 2019년, 2020년 도로 점용 허가 대상으로 인지 하지 못하여 2019년(임시분), 2020년(정기분) 도로 지하매설물(전력관로, 통신관로 등) 점용료(개략 155,036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 이전 도화구역 내 도로에 설치된 건축물 차량 진·출입로 26개소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와 인수(협의) 소홀로 미추홀구 도시경관과에서는 2019년, 2020년 도로 차량진·출입로 점용 허가 대상임을 인지 하지 못하여 점용료 개략 22,587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도로 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에서 누락된 개략 209,623천 원을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②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 지하에 설치하는 각종 매설물 대하여 공사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매설 설치 준공도면[지리정보시스템(GIS) 포함] 등을 제출 받아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서 누락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도로 지하매설물 점용에 대한 협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2) 2018년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 ☆☆☆과에서 ◆◆과로 이관 되어 2019년 ☆☆☆과에서는 ㄷ도시개발사업 도로 소유권 및 권리권 인수시에 지하매설물은 제외 하였음.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관련

기 관 명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과, ΘΘ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 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 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지적사항

미추홀구 △△과 등 9개 부서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추진한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23개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경계 흰스, 차량유도 등, 라바콘’ 등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안내 간판 등의 안전관리비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개략 40,627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하였다.

4. 지적내용에 대한 해결 방안

미추홀구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비에 대하여 사용 확인 및 정산 등에 있어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공사 마다 편차 있는 사용 내역 등을 시공자가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미추홀구 ◆◆과에서 2016.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억 원 이상의 추진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ㄷ동 ***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에 안전화는 30,000원에 구입하였는데, ‘ㄱ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에서는 안전화를 145,000원에 구입하는 등 안전화, 안전모, 산업용 마스크 등의 구입비용이 공사마다 편차 있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안전관리비 정산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공사가 제출한 사용 내역 원안으로 감액 조정 없이 지급하고 있다.

또한 ‘ㅎ로 일원 보도정비공사’(기간 60일)에 안전화 49켤레, ‘ㄱ로 *** 주변 노후 * 정비공사’(기간 50일)에 안전화 37켤레 등 안전 장구 지급에 따른 지급대장(지급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근로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등과 연계 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 및 정산 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구매 영수증과 사진만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공사기간 및 투입인원에 비해 과도하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도 감액 조정 없이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정산) 실무 가이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0000-00호, 0000.00.00.]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확인(정산)
- 안전장구[안전화 한 켤레 60,000원] 확인(정산)
- 안전관리 사용내역 확인(정산) 방법
 - 사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안전장구 지급대장 작성 및 증빙 사진**(근로자 착용 전신 사진 등) 확인(정산)
 - 안전관리비로 구매하는 단일물품(100만 원 이상) 등은 손을 또는 렌털로 구입 정산

조치할 사항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개략 40,627천 원 상당액을 환수 등 적의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 정산할 수 있도록 연초 건설사업 설계기준(안) 작성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 확인 가이드를 작성·수록하여 안전관리비 집행(정산) 증빙자료 확인에 활용 부당 사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¹³⁾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고시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이내에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살펴보면 ㄷ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행정절차(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열람공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공사완료 공고 등)를 미 이행하고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3) 국토계획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市 도시계획조례로 일부 권한이 위임됨(인천광역시장→구청장)

또한, ㄱ동 ***-#번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도시계획시설: 주차장)외 6건의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보고서를 미 제출하거나 공사완료 공고를 미 이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 공사를 마친 공공청사에 대한 미 이행 행정절차를 검토·조치하시고, 미 완료 공고된 공사완료 사업은 조속히 완료공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도로점용허가 사후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도로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 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도로법」 제100조(이행강제금)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6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에 따르면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고,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허가권자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에서는 2017~2020년까지 건축현장(자재적치 등)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 전 허가기간이 경과된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별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점용상태(결과)에 따라 허가기간 연장, 도로점용료(변상금 포함) 추가 징수, 원상복구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건축물 준공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 ■ 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가 되면 기 부과된 도로점용료 납부 여부만을 확인하고 ‘준공적합’ 의견 등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준공(처분)하였다.

또한,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준공처리 시에도 허가사항 확인(시공 기준, 점용면적 준수 여부 등)을 위한 준공검사 없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의 시공사진을 확인한 후 ‘준공적합’ 의견 등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준공 처리하여 왔고, 관련규정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대장 또한 작성하지 않는 등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① 도로점용허가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허가대장을 작성하시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도로점용(건축현장 자재적치 등) 허가기간이 경과된 허가 건에 대하여는 점용상태에 적합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② 도로점용허가(차량진출입로)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장기 미착공·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공사에 착수하였어도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신고) 이후 착수하지 않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건축허가(신고)대지 주변의 환경·토지이용계획, 관련 법률의 변화 등에 따라 추후에 공익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행정절차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시정명령)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2017년 이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공사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추홀구 ㄷ동 ***-*번지 등 21건에 대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일 대지의 중복된 건축허가와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신고) 취소 등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00과

내 용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에 “환경관리비”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따르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 [별표 8]에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건설사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 준공 시 환경관리비 사용실적에 대해 사용항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한 후 부적정한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2020.2.14.부터 2020.5.13.까지 시행한 ‘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서 및 지급내역(공정별 현장 확인) 등을 확인한 후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정산 지급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정산 준공하여 개략 1,216천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시정] 과다 지급된 환경관리비 1,216천 원을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의·시정요구

제 목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청소실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하수도법」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제5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대행기간,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조례 제6조(처리실적 보고)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입·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미추홀구청장과 대행업체간 체결한 「청소대행계약서(2019.1.)」에 의하면 분뇨 청소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과 청소대행의 적정여부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2017.1.부터 2020.9.까지 매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부터 분뇨 청소실적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출 받으면서 홍콩단에서 제출한 1분뇨 처리시설로 입고된 반입량과 실제 청소한 실적보고량이 연도별로 약 0.5~3.92%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확한 원인 파악과 다른 군·구의 사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뇨처리장 반입량과 실적보고량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부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주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청소 실적보고량과 1분뇨처리시설로 입고된 반입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분뇨 청소업자의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시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선요구

제 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¹⁴⁾하고 시행중에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평가원칙)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단 구성은 같은 조례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구의원(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시행 2018.7.1.][조례 제1100호, 2011.12.30. 제정]

그러나, 미추홀구에서는 조례에서 명시한 현장평가단(민간전문가,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구의원) 총 8명을 구성·운영하면서 민간전문가로 협의회 소속의 청소·환경분야 비전문가 2인으로 선정해 평가를 시행하여, 같은 법 제14조제8항에서 정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평가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개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현장평가단 구성·운영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순환골재 사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미 이행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 ◆ 과, ○ ○ 과, ■ ■ 과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각호에 따른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 시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의무사용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 및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에 따라 배출자인 미추홀구청은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올바로 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추홀구에서는 홍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22개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4,328m³를 사용하였으나, 준공검사일 전까지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미추홀구 ◦ ◦ 과에서는 같은 법 제34조(보고, 검사 등)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직원 업무연찬, 교육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공장등록업체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건축면적¹⁵⁾이 500제곱미터 이상¹⁶⁾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완료신고된 공장에 대하여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집적법」 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등록된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 등에 관하여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5)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함.

16) 「산업집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2001.6월부터 2020.10월까지 공장등록된 업체 중 93개소의 공장이 무단 폐업을 하였으나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않는 등 등록된 공장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무단 폐업한 93개소의 공장에 대하여 현장 방문확인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는 구청장 직권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취소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라며,
- ② 또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의 ‘공장종합정보관리> 공장정보검색>휴·폐업 공장조회’ 검색기능 등을 활용하여 공장등록업체의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아울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점검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전기사업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83개소에 대하여 15개소는 개선명령을 누락하였고 68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만 재차 통보하였을 뿐, 1~4년 이상 개선명령을 위반한 수용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일반용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 83개소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전기 공급 정지 요청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전기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정요구

제 목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 계 부 서 ◇ ◇ 과

내 용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기간별 과태료를 부과하여 반납기간 만료일부터 최대 47일을 초과한 경우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¹⁷⁾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함.

그러나, 미추홀구 ◇◇과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구청장의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 34대의 건설기계 대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1~3년 이상 반납 촉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 [시정] ①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되어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하는 관계법규를 위반한 건설기계 34대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납 촉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② 향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미추홀구 종합감사 결과

[수 범 사 례]

수범사례 1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통한 마을교육자원 활성화

- ❖ 관 주도의 정책 집행 경향을 탈피하고 민·관·학 각 주체가 함께 모여 정책을 구성·집행하는 새로운 사례가 됨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교육혁신지구의 추진시 관주도의 정책 구성·집행이 이루어져 민간 영역의 우수한 자원들이 참여가 부족하여 우수한 민간 자원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였음

□ 개선된 점

- 교육지원청과 민간영역의 우수한 자원들이 협의체를 통해 함께 정책 구성·집행할 수 있는 주체로 변모,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의 협력체계를 구성함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우리마을에 놀러ON> 워크북 및 마을교육자원 지도 제작, 향후 마을탐방코스 및 워크북 개발 예정

□ 기대효과

- 타 기관, 주민의 직접 참여형 정책으로써 다양한 주체의 의견과 입장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거버넌스형 정책집행 가능
-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마을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산재한 마을 교육자원 활성화

수범사례 2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 ❖ 구도심 내 오래된 동청사 신·증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효율화 및 다양한 문화·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 제고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구도심인 미추홀구 내 오래된 동청사로 인하여 주민불편 및 불만이 도출되고 다각적으로 변화되는 동 업무를 수요하기에 현 동청사들은 한계가 있음

□ 개선된 점

-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17,완료)을 시작으로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18,완료),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20, 완료), 송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20, 공사),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2020, 설계), 송의1,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2020, 공사)을 추진했으며 동청사 신·증축으로 인해 직원 복지 향상 및 업무 효율성 향상, 주민 만족도 제고 등 불편 사항이 상당히 해소됨

□ 기대효과

- 상기 진행 되는 신축 외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등이 신축 예정이며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구도심 내 도시 재생 촉진과 주민 만족 제고 효과

수범사례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KEEPER(골목지킴이)

- ❖ 다양한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동참하는 민간안전망을 구축하여 이웃의 안부를 파악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등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KEEPER 위촉 운영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다양한 공공부조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세대의 증가 및 장년, 노인층의 고독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독사 방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
- 동 맞춤형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 협약을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 절실

□ 개선된 점

- 민·관 협약을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 : 763명
 - 상수도사업본부(20.2.13.), 남인천방송(20.7.2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미추홀지회(20.8.18.)
- 기존 인적안전망(협의체, 복지통장 등) 골-KEEPER 위촉 : 1,579명
-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 등(협약 外) 골-KEEPER 위촉 : 1,953명
- 위기가구 발굴 : 630세대 / 963명, 지원 및 연계 : 1,427건 / 119백만원

□ 기대효과

- 주민 밀착형 종사자와 협약 등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 1대1 매칭을 통한 안부확인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기대
- 강화된 인적안전망을 통해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수범사례 4 미추-홀(Whole) 살피미 서비스 앱 운영

- ❖ 전 연령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착안하여 증가하는 고령화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학생, 주말 부부 등 1인 가구 세대의 고독사와 각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보호체계 시스템 구축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최근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세대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 사회관계망 단절로 늘어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방안 필요

□ 개선된 점

- 기존 사물인터넷(IOT)센서를 이용해 사물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은 센서 구입, 설치비 등 **고비용이 발생**하나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은 play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해 **저비용으로 운영 가능**
- 기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예산 범위에 따라 소수만 이용 가능하나 미추-홀(Whole) 살피미 앱은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없이 자유롭게 앱 서비스 이용 가능
-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 취약계층 268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1대1 매칭을 통한 사회관계망 형성 및 보호체계 구축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도화1동	도화2.3동
14명	20명	20명	20명	20명	15명	4명	8명	5명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문학동	총계
20명	11명	20명	20명	20명	11명	20명	20명	268명

□ 기대효과

- 다양한 사용자(노인, 청장년, 학생, 장애인 등)의 고독사, 거동불편 등 위험한 상황에서 빠른 구호로 안전예방
- 인적 안전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골-KEEPER)과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를 1대1로 연결하여 사회관계망 형성 및 보호 체계구축

수범사례 5 참!알토란 2020 복지혜택 알림집 제작배부

- ❖ 복지혜택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2019년 첫 시행한 구 특수시책이며,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2019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 현황 및 실태


- '20년도 복건복지부 예산안 약83조 '19년 72.5조원 대비(14%증가)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



□ 문제점

- 복지 위기 가구의 수급 가능성 미 안내에 따른 사망 발생
-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복지사업 실시하나 일부사업 몰라서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존재

□ 사업개요

- 알림집명: 『 알토란 2020 복지서비스 알림집』
- 제작수량: 3,000부
- 소요예산: 3,000천원(전액 구비)
- 수록내용
 - 구·시청 시행 중 또는 예정 복지사업 및 특색사업 알림
 -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 및 임대주택 신청 등

□ 개선된 점(주요성과)

-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골-키퍼)을 통한 복지 서비스 알림집 배부로 위기가구 발굴 시 적극적 정보 제공
 - 골-KEEPER 제보를 통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현황

위기가구 발굴		공적지원		민간자원 연계		기타	
건수	인원	건	지원금액	건	지원금액	건	내용
675건	1,024명	87건	42,139천원	656건	34,365천원	683건	단순안내

- 각종 복지혜택의 종합안내로 서비스 누락 방지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생활안정 기여

□ 기대효과

- 2020년부터 QR코드 삽입을 통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편리한 신청·접수 서비스 구현

		
알림집 표지	QR코드 스캔	복지로 신청페이지 연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골-키퍼 수행 인력의 다양한 복지혜택 숙지로 보다 세밀한 복지 정보 안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여

수범사례 6 지하차도 내 CCTV 모니터링

- ❖ 지하차도 내 CCTV를 설치하여 사무실에서 수시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어 차량사고 및 침수예방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음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당초 지하차도 내부에 CCTV가 3개소(고속종점지하차도 2개소, 석암지하차도 1개소) 있었으나,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신속하지 못하였으며 석암지하차도 1방향 및 용현지하차도, 문학지하차도 등 확인이 불가하며, 현장출동 직원이 현장도착까지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없음

□ 개선된 점

- 건설과 모니터를 통해 현장에 설치된 CCTV로 지하차도 상태와 펌프 가동 상황 수시로 확인가능
- 2018년도 석암지하차도 CCTV 2개소 설치
- 2019년도 문학지하차도 CCTV 2개소, 용현지하차도 CCTV 2개소 설치
- 지하차도 CCTV현황

구 분	기존현황	개선
석암지하차도	1개소	3개소
고속종점지하차도	2개소	2개소
용현지하차도	-	2개소
문학지하차도	-	2개소

- 건설과 내 모니터링 현황



□ 기대효과

- 수시로 지하차도를 확인이 가능하여 우기 전 배수로 상태를 확인하여 침수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및 위험물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처리함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가능
- 현장직원과 모니터링중인 사무실 직원이 연락함으로써 현장도착 시 지체없이 차량통제나 작업지시 가능

수범사례 7 수인선 유희부지 도시숲길 조성

- ❖ 송의역~인하대역 상부 방치되어 폐기물 무단투기와 무단경작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길을 조성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송의역~인하대역 사이 1.5km 철도 국유지 상부가 아무런 시설 없이 나대로 방치되어있어 인근 주택가로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무단 경작 등이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경관을 저해함

□ 개선된 점

-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통하여 국유지 상부 방치된 토지에 국·시비를 지원받아 도시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주변 도시개발지역과 원도심의 완충역할 및 균형발전과 복지혜택 공유하는 공간을 재탄생함
- 수인선 유희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 교부금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임
 - ※ 총사업비: 40억 원(국10, 시5, 구5, 교부금20)

□ 기대효과

- 수인선 상부 유희부지 도시숲길 조성(2021. 4. 준공예정)을 통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아름다운 숲길을 조성

수범사례 8 임목폐기물 재활용

- ❖ 가로수, 공원, 녹지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관내 기업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가로수, 공원, 녹지 등 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처리비용 지속적 증가

□ 개선된 점

- (주)이건에너지(미추홀구 도화동)와 임목폐기물 무상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임목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비 절감

□ 기대효과

- 2019년 임목폐기물 388.24ton 처리비용 절감 (구비 21백만원 절감)
- $388.24\text{ton} \times 55,000\text{원} = 21,353,200\text{원}$
-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에너지로 활용

수범사례 9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기준 수립

- ❖ 생활권 수목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워 적기에 안전 조치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기준: 평가기준 부재)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리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여 대상목 판정이 어려움

□ 개선된 점

-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여, 대상목에 대한 위험성을 판정하는데 도움

□ 기대효과

- 대상 선정에 모호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적합한 사업 대상 검토
- 우리 구 생활 인접지에 위치한 위험수목을 사전에 점검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적 피해를 예방

수범사례 10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 라인 운영

- ❖ 도심지 내 소규모 휴식공간인 공개공지에 주변 여건에 적절한 유형별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 ❖ 도시공간과 연계성 있는 공개공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되도록 운영함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건축주가 내놓은 공적 공간이지만 준공 후 건물 소유자의 사유 공간 인식 팽배로 일반인 통행제한, 불법장소 이용
- 노숙인·음주자 점유로 일반 시민 이용 불편
- 공개공지가 설치되는 지역의 도시공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접근성 단절

□ 개선된 점

- 공개공지 설계 시 유형별(필로티형, 선큰형, 보행 가로형 등)로 현장여건에 적절한 공개공지가 설치 될 수 있도록,【인천광역시 건축사협회】 및 건축심의 신청자에게 우리 구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 운영계획」을 배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유도
- 우리 구 건축위원회 운영 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기대효과

- 도시공간과 연계성 있는 공개공지가 설치됨으로 쉼터의 기능을 높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수범사례 11 과(課) 연구모임 운영

- ❖ 건축과 내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인이 공감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직원 발표 및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 ❖ 행정제도개선, 법령 규제개혁 요구 등 변화를 위한 정책 제시를 통해 건축분야의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 시키고자 함

□ 기존현황 및 문제점 등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개선의지 없이 형식적인 민원 대응으로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함
- 업무 개선 시 예산절감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큼에도 소극적 업무 대응으로 이를 개선시키지 못함

□ 개선된 점

- 분기별로 팀 업무에 관한 제도개선(안)을 팀당 1건 이상 제출하여 건축업무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시킴으로써 예산절감 및 경제 활성화에 노력함(2020년 상반기 실적: 10건 상급기관에 건의)

□ 기대효과

- 업무개선을 통해 민원인에게 더욱더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지원
- 건축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시킴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 건축민원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문성 있는 매뉴얼 확보